



평화나눔의 시선

2026.05.08. | 제26-02호

‘전쟁의 시대’ 교회의 소명: 평화와 민주주의의 문제

1. 세 번째 세계전쟁의 조각들: <평화의 서한>이라는 희망

오늘날 세계는 ‘전쟁의 시대’로 돌입하는 듯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전쟁,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군사적 열전뿐 아니라, 자유와 평등, 민주적 보편 가치에 반하는 포퓰리즘은 정치적 내전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고, 관세전쟁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전쟁들이 횡행하고 있다. 탈냉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종결은 물론이고,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80년의 평화’가 최종적으로 마감하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실현되고 있는 듯하다. 제50차 세계 평화의 날(2017) 담화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날 세계는 “산발적인 세계대전에 휘말리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2022년에는 “3차 세계대전이 선포된 상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로 이를 재확인하였다.

전쟁의 참화를 막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교황 베네딕토 15세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무익한 대학살(inutile strage)’이라 전쟁을 규정하고 이를 종결하자는 7개 항의 제안을 담은 <평화의 서한>(1917년)을 전쟁 당사국들에 보내시며 “물리적인 힘의 균형” 대신 “도덕적인 힘의 정당한 지배”로 대체할 것을 호소하였다. 비록 참전국들이 이를 즉각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전후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이 된 우드로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Fourteen Points)>에 그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었다. 오늘날의 시대는 다시 한번 <평화의 서한>을 요청하고 있다.

2. 전쟁으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전쟁을 속삭이는 자들’을 경계하라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이라 강변했던 1차 세계대전은 호언과는 다르게 두 번째 세계전쟁으로 귀결되었다. 컬럼비아대 역사학자, 프리츠 스톤(Fritz Stern)이 말한 바와 같이 “1차 세계대전은 20세기의 첫 대참사이자 다른 모든 대참사를 야기한 대참사”였을 뿐이다.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그리고 이란에서 여전히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 100여 년 전에 베네딕토 15세가 경고했듯이, 전쟁은 증오와 복수의 슬픈 유산을 남기며 또 다른 전쟁을 예기(豫期)하는 것이다.

미시간대의 정치학자 싱어(David Singer)가 설파한 바와 같이, “역사적 경험으로나 논리적 적용으로 보더라도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para bellum)’는 일상화 되어버린 이 독트린은 어떠한 평화적 전망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나 ‘파라 벨룸’ 독트린의 생명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이로워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무기로 상대방을 겨누는 채 스스로 검투사의 자세를 취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파라 벨룸’ 독트린에 대한 역사의 반증이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para pacem)’해야 한다.

두 번에 걸친 참혹한 대전쟁을 끝내면서 그리고, 뒤이은 냉전을 해체하면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것들이 오늘날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규범에 입각한 질서는 파편화되고 강대국 정치(힘의 정치)가 역사의 무대로 복귀하고 있으며, 세력권 쟁탈, 핵무기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3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50년은 핵무기의 시대가 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핵무기 증강을 선언하였다. 또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을 보며 북한은 핵 보유 결정에 안도할 것이고, 이란은 핵 군비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다.

냉전이 정점으로 향하던 시기에 교황 요한 23세는 핵전쟁 위협에 직면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1962)’ 직후 반포한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에서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 갈 핵 경쟁을 멈추고 군비를 축소하는 평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신뢰에 의한 평화의 길을 제시한 바 있다. 과거 냉전 시대의 정점에서 교황 바오로 6세가 유엔 연설(1965)에서 한 호소,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No more war, war never again)”라는 메시지가 절실한 오늘날, 정치지도자들은 ‘전쟁을 속삭이는 자들(war whisperers)’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듯 전후 80여 년 동안 비오 12세, 요한 23세,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프

란치스코, 그리고 레오 14세에 이르기까지 역대 교황들은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전구(轉求)하였다.

3. ‘정당한 전쟁’이라는 유혹: ‘예방전쟁’의 치명적 결과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전쟁(just war)’이 있을 뿐인데, 침략 전쟁에 대항하는 전쟁, 방어 전쟁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유엔헌장에 명시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전쟁이 방어 전쟁이다.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self defence)은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적 권리, 즉 방어 전쟁의 정당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적이고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 먼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예방전쟁, preventive war)은 침략 전쟁으로 국제법 위반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선량한 국가’의 ‘선의’나 ‘안전’을 위한 전쟁을 제한적으로 정당화하였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이론적 전통을 계승하여 ‘올바른 주권자(rightful sovereign)’가 ‘정당한 명분(just cause)’으로 일으키고 참여자들(군인들)이 ‘올바른 의도(right intent)’로 수행하는 전쟁을 정당화하였다. 고대와 중세 신학의 ‘정당한 전쟁’론은 현대 정치학에서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로 이어졌다. 왈저는 정당한 전쟁의 두 가지 기준(criteria)으로 ‘전쟁을 선포할 권리(전쟁선포권, jus ad bellum)’와 ‘전쟁에서의 올바른 행위(전시국제법, jus in bello)’를 제시하였다. 전쟁의 시작이 정당했는지라도 전쟁 중에 동원된 수단이 올바르지 않다면 정당한 전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들이 전쟁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다면 민간인들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전쟁에서 사용하는 수단과 방식의 정당성(jus in bello), 특히, 정당한 전쟁론의 오랜 전통인 ‘비전투원(민간인)의 피해 방지(noncombatant immunity)’를 옹호하였다. 이에 따라 나치즘과 파시즘의 침략에 맞선 연합국의 전쟁 결정은 정당하므로 2차 세계대전은 정당한 전쟁이지만, 히로시마 원폭은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왈저의 철학적 사유가 정당한 전쟁 개념에 미친 영향은, “미국의 정치지도자들과 여론 주도층들이 전쟁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마다 ‘왈저의 축복’을 받으려 애쓰는 듯한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락 연설(2009)에서 왈저의 ‘정당한 전쟁’이 가능한 세 가지 요건을 언급하였다. 세 가지 요건은, 전쟁을 선포함에 있어서의 정당성(jus ad bellum),

전쟁 수행 과정상의 정당함(jus in bello), 그리고 전쟁 종식 이후(전쟁 결과)의 정당성(jus post bellum)을 말한다. 이 요건들에 따르면, 대량 학살 등에 대항한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은 정당하지만, 당시 미국이 개입하고 있던 부시의 이라크전쟁(2003)은 개전 양태에 있어서 ‘정당하지 않은’ 전쟁이었다. 전쟁이 아닌 다른 수단(제재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최후의 수단인 전쟁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회피 가능한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정당한 전쟁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개전의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팔레스타인전쟁(2023)에서는 ‘전쟁 수행의 정당성,’ 사용된 무력의 ‘비례의 원칙’을 이스라엘은 위반하였다. 두 전쟁 모두 정당한 전쟁의 영역을 벗어났다.

이러한 점에서 미-이스라엘-이란 전쟁 또한 그러하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자행된 수천 명에 달하는 민간인 살상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전쟁장관 헤그세스가 3월 13일 펜타곤 기자회견에서 “적(이란군)에게 전쟁포로 대우도 어떠한 자비도 없다(no quarter, no mercy)”고 한 발언은 정당한 전쟁의 기준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포로를 모두 사살하겠다는 의미이다. 전쟁장관으로서 헤그세스의 발언은 헤이그 협약(1899, 1907) 제네바협약(1947) 위반 등, 국제법을 부정하는 발언이자 미국의 전쟁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4. ‘약탈적 패권국가’와 ‘전능하다는 망상’: 전쟁에 이르는 길

하버드의 정치학자 스티븐 월트(Stephen Walt)식으로 말하면,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은 ‘약탈적 패권국(predatory hegemon)’의 전형적인 행동이다. 월트에 따르면, 약탈적 패권국가는 다른 국가들을 영구적인 복종 상태에 두는 데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지배(dominance)를 목적으로 복종(submission)을 강요한다. 따라서 약탈적인 패권국가는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해야 할 것을 감수”하는 세계를 선호한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압송하면서 백악관 부비서실장 겸 국토안보보좌관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국제법을 논하는 것은 쓸데없는 사치”이고, 우리는 “힘과 무력, 권력이 지배하는 현실 세계에 살고”있으며, “이것이 세상의 철의 법칙이다”라고 브리핑하였다. 트럼프는 이를 두고 “항상 세계 패권을 결정해 온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 외무장관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는 세계가 ‘이념 경쟁의 시대(신냉전)가 아니라, 강자의 법칙이 통용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이를 비판하였다.

냉전해체 후, ‘문명의 충돌’을 예견한 사무엘 헌팅턴(S. Huntington)은 일찍이 1999년에 ‘불량 초강대국(rogue super power)’의 출현을 경계하였다. 헌팅턴에 따르면, ‘역사상 유례없는 자애로운 패권국(benevolent hegemon)’이라 스스로 자부하는 미국이 여러 나라를 ‘불량국가(rogue state)’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여타 국가들의 눈에는 일방주의 등으로 인해 미국이 불량 초강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학계나 외교가에서는 냉전에 승리한 패권국가 ‘미국의 오만(hubris)과 일방주의’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2026년 2월 스티븐 윌트가 악랄적 패권국가의 위험성을 경고한 직후에 벌어진 이란 전쟁은 단순히 우연이나 공교로운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모든 일이 ‘헤게모니 국가의 오만(hubris)과, 이를 저지해야 할 유럽 등 선진국의 위선(hypocrisy)의 결과’라는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애로운 패권국’이 사라진, 그리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가 부재한 흡스적 세상에서 살아야 할 위험에 처하고 있다.

BBC의 한 논평대로, “한때 세계 안정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이란전쟁에서 ‘문명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망상, 힘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다시 말하면 “전능하다는 망상(delusion of omnipotence)”에 경종을 울리는 레오 14세의 훈계는 이러한 패권적 오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만은 하느님을 대적하려는 행위이고, 바벨탑을 세운 고대 세계의 패권국 바빌로니아가 이러한 연유로 심판에 처한 교훈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5.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제4의 민주화 물결’: 평화에 이르는 길

2026년 3월 17일 발표된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41위(2024)에서 22위(2025)로 상승하였다. 윤석열 정권의 비민주적인 통치와 그 파국적 결과물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선거를 통한 최소한의 민주주의—로 단계가 하락한 바 있다. EIU의 분류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은 다시 자유민주주의(V-Dem)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에 복귀하였다. 그렇다면 계엄과 내란을 극복한 한국은 민주주의의 복원력이 작동

하고 있는가?

스웨덴 <민주주의와 다양성 연구소(V-Dem)>의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주의로의 ‘전환(U-turn)’보다는 권위주의로 역행하는 ‘역전(Bell-turn)’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글로벌 수준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해 준다. 이처럼 세계는 지난 25년간 민주주의 퇴행을 겪어왔으며,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역행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다양성 연구소가 발간한 2026년 보고서의 제목인 “민주주의 시대를 해체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이러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의 암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신뢰를 철회할 근거는 없다. 짧게는 50여 년, 길게는 두 세기에 걸쳐 민주화의 물결이 세 차례 밀려왔던 역사적 기억이 여전하다면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작동할 거라는 역사적 전망 또한 가능할 것이다.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루칸 웨이(Lucan Way)가 (민주화의) 세 번째 물결에 속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권위주의화와 체제 붕괴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인 모습,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듯이, 우리는 다가올 ‘네 번째 민주화 물결’을 기대하며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democratic resilience)을 제고해야 한다. 탈냉전 이행으로 형성된 단극적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해체 과정에 있는 오늘날, 전후 80년 만에 겪는 세계질서의 대전환기에 민주화의 ‘제4의 물결’, 민주주의로의 대이행을 준비해야 한다.

6.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평화의 네 가지 기둥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하였다. 현재의 판결문에 따르면, 탄핵의 사유와 목표는, “(피청구인과 그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으므로 민주주의의 퇴행(democratic backsliding)을 저지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 즉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판결문대로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으로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이 작동하였던 것이다.

세계질서 해체기의 대표적인 사회적 증상은 포퓰리즘인데, “(원하는 걸) 말하라 (내가) 주겠다”는 식의 정치적 슬로건으로 표출된다. 마가(MAGA)에 집약된 트럼프주의의 대선에서의 승리는 이러한 포퓰리즘의 일시적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불확실성의 근원은 트럼프가 아니라 질서 해체기에 있는 세계이다. 헨리 키신저식으로 말하면, 트럼프는 세계질서가 깨지는 시대적 징표일지언정 세계질서의 창조자일 수는 없다. 트럼프는 질서 해체를 가속할 뿐이고 그 또한 이러한 세계의 산물이다.

나치 전범의 재판에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발견한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195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치의 파괴가 전체주의를 낳았다.” 이에 아렌트가 내린 철학적 처방은 “전체주의의 극복은 정치의 회복”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정치의 요체가 민주주의이며, 민주정치가 포퓰리즘이라는 병적 증세의 처방전이다.

2003년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반포 40주년을 맞이하여 요한 바오로 2세는 진리, 정의, 사랑, 자유 등 평화의 네 가지 기둥을 재차 제시하였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진리가 평화를 이룩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면 정의가 평화를 이룰 것이며,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로 느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남들과 나눈다면 사랑이 평화를 이룩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이성애 따라 행동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자유가 평화를 이룩하고 그 평화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이러한 평화의 기둥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포퓰리즘을 비롯한 정치적 내전뿐 아니라 ‘인류의 패배’를 의미하는 군사적 열전을 거부하는 민주주의는 평화로 가는 입구이다.

7.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하느님의 자녀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오 복음서 5장 9절)

헤그세스 미 전쟁장관은 3월 25일 펜타곤 청사에서 전쟁 승리를 갈구하며, “...모든 탄환이 적들에게 명중하게 하시고...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압도적인 폭력을 발휘하게 하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 기도가 무슨

림이 다수인 이란과의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비평하였다. 기사의 논평대로 이는 중세 시대의 십자군 전쟁, 종교전쟁을 연상시키며, 미국의 전쟁 규범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것이다.

레오 14세는 지난 성지주일 미사(3.29)에서, “예수는 전쟁을 거부하는 평화의 왕이시니, 누구도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그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쟁을 일으키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을 거부하십니다”라고 강론하였다. “하느님은 어떠한 전쟁도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이다. 이에 세계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레오 14세의 강력한 평화 호소에 진심으로 공감”을 표하였다. 2026년 부활절 메시지(Urbi et Orbi)에서도 “부활의 힘은 비폭력이고, 이것이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힘”이라 당부하면서, “전쟁을 일으킬 힘을 가진 자는 평화를 일으키라”고 레오 교황은 호소하였다.

4월 16일 아프리카 4개국 순방 중 카메룬에서 전한 레오 14세의 메시지는, “한 줌의 폭군들이 세상을 유린하고 있다, 자신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종교와 하느님의 이름을 조작하는 이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며, ‘평화를 약탈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적 경종을 울리셨다. 레오 14세 교황이 아프리카 순방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도시인 알제리의 히포 유적지를 방문한 이유는 자신의 영적 스승인 성 아우구스티노의 ‘평화’ 메시지를 묵상하기 위해서였다. 1600여 년 전 ‘정당한 전쟁’을 말한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신국론(神國論)》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100번 이상 반복하였고, ‘평화는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설파하였다.

지난 4월 11일 이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철야 평화 기도회 강론에서 레오 14세는, “전쟁은 분열시키지만 희망은 하나로 묶는다”면서 평화에 대한 희망은 전쟁에 대한 신념보다 강하다고 강조하였다.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5년 희년(Jubilee 2025)’을 선포하면서 전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실망시키지) 않는다(Spes Non Confundi)”는 메시지를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모두에게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메시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의 예언자’가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격려한 대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의 순례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레오 14세가 선포했듯이, 이제 세상의 모든 전쟁을 속삭이는 자들에게 선언해야 한다. “멈춰라, 이제 평화의 시간이다.” <끝>